

광주 아동양육시설 잇단 학대 파문

시설 원장, 통제·관리 목적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설 운영 광주YWCA 뒤늦은 경위 파악 의혹 제기 같은 법인 다른 시설서 원장 등 9명 고발해 경찰수사

사회복지법인 광주 YWCA가 운영하는 모 아동 양육·복지시설에서 불거진 잇단 학대 행위로 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설 원장이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는데도 법인 측의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와 책임 회피성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 YWCA 등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최근 직권 조사를 통해 광주 YWCA가 운영하는 양육시설 원장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9월 이 시설에 부임한 원장은 아동·청소년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입원에 대한 동의를 강압적으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 등을 명목으로 인권 침해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14년째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A(19·여)씨가 “지난 2016년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받고 왔고,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 ‘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병원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원장은 이 같은 행위를 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A씨의 입원 치료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A씨에 대한 악평을 적은 경위서를 써오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후 ‘불행 장애’ 등이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시설 아동은 모두 5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부모가 없었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0개월까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없이 아동을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시도한 행위도 밝혀졌다. 직원들에게도 휴가 금지령을 내리는 등 각종 갑질을 해왔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임상 심리 상담원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설 생활 규정에 ‘일시 귀가 조처’를 징계 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해 동의 없이 원

정으로 일정 기간 돌려보내는 등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7월19일 원장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 YWCA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은 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달 10일에서야 보고했다.

또 ‘인권위 권고는 사실과 다르다.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지난 2월부터 조사를 했고 7월 중순에 YWCA에 인권 침해 결정문을 보냈지만 YWCA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육 시설 일부 관계자들은 두 달째 전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

해졌다.

해당 시설은 과거 아동 학대, 공금(생계비) 횡령 등으로 사법 처리 또는 행정 처분을 받아 시설장이 교체된 적이 있는데도 인권 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과 인사권을 가진 YWCA 측이 사실상 학대 행위를 은폐하고,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정되지 양육될 경제·정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동들을 보호한다. 이들의 수준·적성에 맞는 자립 교육을 진행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원장이 부임한 이듬해부터 인권 침해성 언행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되려 보복을 당하기 일수였다”며 “원장의 부적절

한 행위를 제재·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 사건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녹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사실 아동들은 과거 학대·방임 등을 당해 신체·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대가 반복될 점으로 미뤄 정서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로 사대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YWCA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파악이 끝나는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한다. 재발방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A씨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 법인 내 다른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원장과 이사 등 9명을 고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최남규 기자



지금은 미술실기시험중 9월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19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미술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광양시의원,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논란

광양시의원이 관공서 주차장 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걸치기 주차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월28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에 따르면, 광양시의원 A씨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광양시 사무소 주차장에 불법 주차 해놓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A 의원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등 두 칸을 차지

하는 주차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오전 11시 17분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했다.

이 시민은 사진과 함께 “시의원은 특권의식을 누리는가 시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적발돼 벌금을 납부하는데 시의원의 승용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A 의원은 말쑥이 일차 급한 용무로 잠시 주차한 것이 오해를 불러왔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주차가 아닌 정차였고 6~7분 정도 읍사무소 직원과 얘기하고 돌아와 차량을 이동시켰다”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외 정차한 사실만 확인해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양시는 주차 일시와 장소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광양시의회 주차장에서 한 시민이 의원들을 기다리며 수십분간 공회전하던 버스를 촬영하고 문제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광양=김승호 기자

동료선원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50대 구속

목포해양경찰서는 9월28일 동료선원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신안 임자선적 9.77급 연안저장 어선 G호 선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신안군 임자도 선착장 30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G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선원 B(45)씨를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 등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선내에서 1.8l 소주 1병반을 나눠 마신 후 B씨와 작업 등을 놓고 말다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날 오후 1시51분께 G호에서 B씨가 추락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30여 분만에 숨진 B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숨진 B씨는 지난 26일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 예비 소견 결과, 익사에 의한 죽임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A씨로부터 ‘꽃김에 밀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름 블랙박스에 녹음’ 차털이 10대들 덜미

광주 북부경찰서는 9월28일 새벽시각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던 혐의(특수절도)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7)·C(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28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20만원을 훔친 뒤 같은 날 오전 5시께 같은 차량에 보관 중인 35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분석, 범행 과정에 서로의 이름을 부른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차량에 보관 중인 추석 명절 상여금을 훔친 전력이 있는 B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말다툼 끝 남편 흥기로 찌른 아내 입건

순천경찰서는 9월28일 말다툼 끝에 남편을 흥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3·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33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거실에서 남편 B(53)씨의 신체 일부를 흥기로 7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지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술집 주인과 다툰 때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조개캐기 체험자 태운 경운기 전도 7명 부상

인천 강화도의 한 섬에서 조개캐기 체험자를 태우고 가던 경운기가 전도돼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경운기 운전자 A(7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9월30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1분께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 한 길에서 A씨가 몰던 경운기가 2.5m 아래 논둑으로 추락했다.

당시 경운기에는 A씨를 포함해 8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여성 2명은 다리와 갈비뼈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조개캐기 체험을 하러 경운기를 타고 갯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커브 길에 운전대를 꺾지 못해 논둑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